

# 밤새 코로나19 확진자 10명 무더기 발생...공황의 대구

## 31번 확진자 의심 증상에도 진료 거부 논란 더 이상 대구도 안전지대 아냐... 공포 확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꺼번에 10명이나 쏟아지고 31번 확진자가 호텔과 교회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접촉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구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19일 경북대 병원 인근 식당가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뜰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였고 집에서 아예 도시락을 준비해 출근하는 직장인도 눈에 띄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45)는 "31번 확진자가 1000여명과 접촉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다.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할 생각이다"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식당에는 가기가 꺼려진다. 식당 갈 바에는 배달음식을 사 먹겠다"고 말했다.

동인동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박모씨(63·여)는 "그렇지 않아도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장사가 안되는데 정말 큰일났다. 신종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렇다 굶어 죽겠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돼야 한

다"고 안타까워 했다.

대구 첫 확진자로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31번 환자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1번 환자는 발열 등 의심증상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코로나19 검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송현동에 사는 이모씨(52·여)는 "대구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큰 일났다. 본인이 증세가 나타났을 때 바로 검사를 받았으면 이만큼 확산되지 않았을텐데 너무 무책임하다. 외국에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열이 나고 기침이 있으면 한번쯤은 의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젊은이들은 더 민감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헤치며 코로나19의 확산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정모씨(23·여)는 "친구들 사이에 '확진자가 어디 갔더라', '어디는 다녀왔으니 가지 마라'는 등의 온갖 불확실한 정보들이 SNS를 통해 돌아다닌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로난한방병원에 남은 환자를 이날 오후 타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로난한방병원 앞에서 방호복을 입은 경찰관이 주변 교통을 통제하는 등 환자 이송준비를 하고 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 주장했다.

여행과 교육사업을 하는 업체 종사자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신천동에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50)는 "코로나19로 모

든 교육일정을 2주일 이상 미뤘다. 교육을 하려면 학생들이 모여야 하는데 대구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으니 언제 다시 교육을 시작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앞이 캄캄해진다. 업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공포스럽다"고 개탄했다.

뉴스1



코로나 공포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키우는 가짜뉴스와 가짜환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주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혐의 적용 및 입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1일 제주 파출소 두 곳을 임시 폐쇄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던 코로나19 의심환자가 허위 진술로 혼신을 빚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 제주도,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 3월·11월 공표...관련 업계 자율적 가격경쟁 유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들이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제주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 의뢰,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조사 대상 지역 6곳에서 4곳을 더 늘려 총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품목은 전자기기, 생활용품, 화장품, 식품의약품, 가구 침구류, 의류섬

유용품, 취미용품, 가전제품 등 8개다.

도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 도서 지역 10곳에 대해 택배업체가 부과하는 특수배송비 현황을 조사, 6월과 11월 공표할 방침이다.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은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사항이다. TV 홈쇼핑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내 택배시장 규모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지만 '섬'인 제주도는 항공이나 선박을 이용한다는 특수 여건 때문에 '특수배송비' 형태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는 3903원으로, 타 지역(도서지역 제외) 평균 784원보다 5배 이상 비쌌다. 여기에 제주도민들은 '도서권역'을 분류돼 3000원에서 9000원 가량의 특수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해 왔다.

현행법은 화물 집하,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택배업자는 운임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선고 하루 앞둔 고유정, 20년만에 첫 여성 사형수될까?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7) 사건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모두 유죄라면 고유정의 형량은 무기징역이 불가피하고 사형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있다.

첫번째 쟁점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이나,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냐다.

고유정은 재판 내내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주장해왔으나 전 남편 혈흔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검색구입하는 등 계획살인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많다.

두번째 쟁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유무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 역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인정할만큼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의붓아들 부검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누군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숨지게 했다는 점을 들며 살인사건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현 남편 즉

친아버지의 과실치사에 초점을 맞췄으나 훗날 전 남편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고유정을 수사해 의붓아들까지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차례 유산 과정에서 불화를 겪은 현 남편을 향한 적개심이 살인을 불렀다는 것이다.

국민 정서와 달리 재판부에게 사형 선고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국내에서는 1997년 이후 20여년간 사형 선고는 있어도 실제 집행된 적은 없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현재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할 우리나라 미결사형수는 56명(군인 출신 사형수 제외)이다.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1명이다. 이 1명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다.

여성 사형수는 더 찾기 어렵다. 현재 미결사형수 56명 중에 여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 이전에 유명(?)한 여성 범죄자로는 사이코패스 엄인숙이 꼽힌다.

그는 2005년 보험금을 타내려고 남편과 가족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그 이전에는 1980년대 후반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독약을 먹여 살해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으로 불리는 김선자가 있다.

사형이 선고된 김선자는 1997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여성 연쇄살인범의 사형 이후 2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제주에서는 17년 전인 2003년 60대 슈퍼마켓 주인 등 3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이모씨(당시 37)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다.

이씨는 서울에서 검거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여서 제주지법 사형 선고는 1997년 이후 찾아보기 어렵다.

무기징역도 흔치는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3월 50대 여성을 야산에 끌고가 강간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사매 터널 사고 현장 수습 마무리...“사고 원인 규명 집중”



48명의 사상자가 난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 2터널의 사고 현장 수습작업이 마무리됐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발생 32시간 만인 전날 오후 8시에 터널에 남은 탱크로리와 곡물 운반 차량 견인을 끝으로 사고 차량 수습을 마쳤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으나 추가 사망자 등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5명, 부상 4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구간 통행이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터널 조명 등 시설과 노면 파손이 심해 복구, 안전점검을 마치기까지 최소 2주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대형 인명피해가 난 이번 사고 원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고의 1차원 인제공사로 지목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불러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씨는 사고 발생일인 17일 낮 12시20분께 사매 2터널 진입 전 장갑차를 실은 트레일러를 추돌했다. 이후 뒤따라오던 질산 1만8000t를 실은 탱크로리와 곡물을 실은 트레일러 등 수십대의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큰 불이 발생했고, 다른 차량들로 번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앞서 가던 군용차량이 감속해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였으나 차량이 미끌어졌다"며 "차량이 이탈된 후 방향 조정이 불가능해 멈춰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 제설 상태, 운전자의 과속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 산불 제로화 위해...삼척시, 봄철 불법소각행위 단속

강원 삼척시가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4월30일까지 봄철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소각 산불 취약지역과 특별관리 대상지역 내 산림 인접지(산림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생활쓰레기 소

각, 산림사업장 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도 우리가 물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 유산이다.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로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과 신고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